형 법

0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 ②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도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구 아동복지법(2000.1.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해석이다.

0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②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다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공소

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03.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 ②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 ③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 ④ 무단반출한 물품 중 칼라인화지에 대한 세율이 범행 당시는 100퍼센트였으나 그 후 관세법의 개정으로 40퍼센트로 변경된 경우, 세율의 변경도 형의 변경이고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이므로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04. 다음 중 형법상 천고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 경사승진]

- ㉠ 사자명예훼손죄
-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 존속협박죄
- ㉤ 업무상 비밀누설죄
- ㉥ 과실치상죄
- ㉦ 비밀침해죄
- ㉧ 준강제추행죄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05.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11 경장승진]

- ① 통화위조죄   ② 음행매개죄
- ③ 도박개장죄   ④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

06.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의 징표기능을 부정하게 되어 범죄론체계의 일관성이 없고,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 ②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작위에 의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이 때 교사·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③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범무사가 아닌 사람이 범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데에도 자신이 범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범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거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범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07. 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책임요소설은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를 초래하고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불합리가 있다.
- ②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을 요하므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

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④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짐에도 계속하여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08.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 ③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09. 다음은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11 경장승진]

- ㉠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 ㉡ 각종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든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운전자로서는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 ㉢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인터체인지 진입로부근 고속도로에서 제한최고속도를 20km 초과한 속도로 고속버스 우측으로 추월한 직후에 자동차의 30m 내지 40m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2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 ㉣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10.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① 형법 제15조 제2항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② 혐의의 공범에게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 이외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혐의의 공범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甲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수인 乙을 협박하여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乙의 목 부분에 겨누고 협박하자 이에 놀란 乙이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甲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찢려 상처를 입은 경우에 甲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④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11. 다음은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침해는 작위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나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①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자구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청구권에 생명, 신체, 명예 등의 권리와 같이 한 번 침해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권리도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④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떡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13.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떡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하였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판례에 의할 때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1 경사승진]

- ①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
-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
- ③ ‘회사 직원이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번호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
- ④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한 행위

15.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①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한다.
- ②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 자체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 ④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감 승진]

- ①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 ②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 ③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인 관련성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책임비난의 근거는 원인행위에 있게 된다.
- ④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7.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 학자격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여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 ③ 마약취급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 주었다하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④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제한고의설에 대해서는 상습범 또는 확신범 등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특별히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형사정책적인 결함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18.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틀린 것(X)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 나이트클럽 주인이 지도교수의 인솔 하에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단체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위 학생들 중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은 없다.
- ㉢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 ㉣ 선거기간 중에 지구당의 대표자가 당직자회의를 마치고 난 후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당직자 뿐 아니라 일 반당원에게도 술과 음식을 제공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① ㉠(O) ㉡(O) ㉢(O) ㉣(O)
- ② ㉠(O) ㉡(X) ㉢(O) ㉣(O)
- ③ ㉠(X) ㉡(O) ㉢(X) ㉣(O)
- ④ ㉠(O) ㉡(O) ㉢(X) ㉣(O)

19. 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사 승진]

- ① 강요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 ② 강요의 수단인 폭력 또는 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피강요자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피강요자가 강요자와 공범이 될 수 있다.
- ③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개념에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없다.

20.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인 공용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1. 다음 중 불능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 ㉣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던 경우

22. 예비, 음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경사 승진]

-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에 대해 예비의 공동정범 뿐 아니라 종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인데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있다.
- ㉢ 법률에 예비, 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는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지 본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 수도불통죄(형법 제195조), 간첩죄(형법 제98조), 중립명령위반죄(형법 제112조),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는 모두 예비, 음모가 처벌되는 범죄이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3.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해당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4. 다음 중 합동범으로만 연결된 것은? [11 경장승진]

- ① 특수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
- ②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 특수공무방해죄(형법 제144조 제1항)
- ③ 간통죄(형법 제241조 제1항) - 도박죄(형법 제246조 제1항)
- ④ 소요죄(형법 제115조) - 내란죄(형법 제87조)

25. 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 치과 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 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② 타인이 경영하는 축산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하였을 뿐 목장의 경영문제에까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 설치의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③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

- ④ 중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만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중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7.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甲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甲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도록 한 행위
- ㉡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 ㉢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 ㉣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행위
- ㉤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행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8.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범의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③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 ④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9. 다음 중 괄호안 범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②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그 후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한 경우(사기죄와 횡령죄)
- ③ 소속대 병기와 선임하사가 같은 부대인사계 직원으로부터 총기부족사항을 듣고, 위 총기부족은 행정착오로서 그 총기는 같은 중대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착오인 사실을 감추고 다른 곳에서 총기를 구입해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뇌물죄와 사기죄)
-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36.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은 빗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뒹굴게 하여 그 순간 그 등에 업힌 피해자의 딸(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가 서로 다른 인격자이므로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③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경우, 위 '소화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7.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경찰로부터 뺨까지 맞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앞으로 수박이 없으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38. 체포·감금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한 감금 행위도 가능하다.
-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잠재적 의미에서 행동의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은 모두 감금죄의 객체가 되므로, 책임능력 등을 갖지 못한 정신병자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
-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체포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가중처벌된다.
- ㉤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9. 형법상 약취·유인·매매된 자 또는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 형을 감경하는 규정(해방감경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11 경감승진]

- ① 인질상해·치상죄   ②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 ③ 부녀매매죄   ④ 인질강도죄

40.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 17세 소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하였으나 다음 날 그 소녀가 탈출하여 간음하지 못한 경우 간음목적약취·유인미수죄가 성립한다.
- ㉡ 18세의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흥주점에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출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 제왕절개수술을 함에 있어 임산부의 상태변화, 의료진의 처치경과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1.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 ②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 ③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 ④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를 미성년자의제강

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4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① 기사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사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 ② 이혼소송중인 처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주었던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별도의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 ③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 ④ 피고인이 집에서 치료부터 전날 외박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처에게 피해자와 여관방에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은 공연성이 없다.

43.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 모욕죄는 생존자, 사자 모두에게 성립한다.
- ㉡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4.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뚝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경우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④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45.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다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 ②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6.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①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③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 ④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47.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 아버지의 방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하였는데 아버지의 물건이었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형법 제35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 ㉢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 이 민화는 피고인오빠(이하 동인이라 한다.)의 특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점유, 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당시 비록 동인이 집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 소유의 집 벽에 걸려 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공동점유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8.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甲이 A로부터 자신의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A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소재 연안아파트 상가 중국집 앞에 세워져 있는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 가서 다른 곳에 버린 다음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버린 경우 위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④ 甲회사가 乙에게 철재를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물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甲회사의 사원인 피고인이 위 乙로부터 피해자 丙이 위 철재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운반하여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49.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 사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회사의 목적 업무 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사본을 가져간 경우, 비록 그것이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도 문서의 사본에 불과하고 또 인수인계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옥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옥지로 그 물건들을 반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유기하여 둔 채 섬을 떠난 후 10년 동안 그 물건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섬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그 소유자가 섬을 떠난 지 7년이 경과한 뒤 노후된 물건들을 피고인 집 가까이 옮겨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0.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①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비록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수회에 걸쳐 ‘충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는 말을 나눈 행위는 강도음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④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원 등이 든 피해자의 키홀더를 우발적으로 가져간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1. 강도 등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①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하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줄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죄의 목적달성여부와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경우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일지라도, 甲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甲에게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힘이 너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감도 채우지 못

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된다.

52.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①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모의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경우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 ③ 준강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 ④ 준강도는 목적범이다.

53. 다음 중 사기죄(미수 포함)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 무효인 가등기여서 그 말소를 구할 권리를 가진 부동산소유자가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경우
- ㉡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 ㉢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 ㉣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4.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틀린 것(X)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별적 사후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 ㉢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 ① ㉠(O) ㉡(O) ㉢(O) ㉣(O)
- ② ㉠(X) ㉡(O) ㉢(X) ㉣(O)
- ③ ㉠(X) ㉡(O) ㉢(X) ㉣(X)
- ④ ㉠(O) ㉡(O) ㉢(X) ㉣(O)

55.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①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더라도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없었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를 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56.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① 사기죄의 성립에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 ② 예금주인 甲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경우,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지급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7.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 ㉡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하였으나 마감시간이 지나도록 다른 업체로부터의 매수신청이 없어 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된 여관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 자기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기망의 수단으로 영득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8. 甲은 피씨방에 게임을 하러 온 乙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을 乙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을 취득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④ 배임죄

59.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채권담보로 수표를 교부받은 후에 장물인지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 ② 은행지점장이 거래처의 기존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으로 정리한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한다.
- ③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로써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장저당권 설정자로부터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해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60. 공갈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①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자의 사용자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 ④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61.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①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체의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형태인 일명 '프랜차이즈 계약(가맹점계약)'에 있어서 그 가맹점주가 보관중인 물품판매대금을 본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 할 것이다.

62. 다음 기술 중 횡령죄(업무상횡령죄 포함)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 ㉡ 물건 납품의 선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도인이 물건 납품 전에 선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 ㉢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 ① ㉠, ㉣   ② ㉡, ㉣   ③ ㉠, ㉢   ④ ㉡

63.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① 형법상 장물죄는 상습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횡령죄는 상습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64.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묶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후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수탁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① ㉠   ② ㉡   ③ ㉠㉢   ④ ㉡㉢

65.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 경장승진]

- ㉠ 부동산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그 액면금을 확인하기 위해 B에게서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A는 수표를 건네받아 수표의 매수와 액면금액을 확인하던 중 수표총액이 액면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수표들 중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수표들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6. 배임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가장 옳은 것은? [11 경장승진]

- ①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부당하게 엮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사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따로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67. 판례에 의할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1 경감승진]

- ㉠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 ㉡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물품을 신용장대금 변제 전에 보세창고업자로부터 인도받아 임의 처분한 경우
- ㉢ 양품점의 임차권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점포이중양도행위를 한 경우
- ㉣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청산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개인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 ㉤ 경락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락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8.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지급을 약속받고 위 축제가 끝난 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② 정상적으로 KOC 위원의 위촉절차를 밟지 않고 KOC 위원이 되고자 KOC 위원장에게 KOC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등의 부탁은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③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④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 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69.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① 뇌물로 받은 시계는 장물에 해당한다.
- ② 가입권자가 전화관서로부터 전화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인 전화가입권이 강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매수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장물죄는 재산범인 본범이 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법은 실제로 장물죄를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 ④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타에 양도한 물건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이므로 장물이 될 수 있다.

70.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①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 ②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유형에 포함된다.
- ③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④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71.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①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 ② 甲이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처丙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다음 丁에게 위 건물에 있는 점포를 임대하고, 丁과 실내장식공사 대금 문제로 다툰 후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丁을 출입하

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甲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乙이 甲의 명의를 빌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기로 서로 합의하고, 甲의 신청에 의하여 甲명의로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등록증을 乙이 인도받았는데, 甲이 乙의 손가방에서 위 영업허가증과 사업등록증을 몰래 꺼내어 갔다면, 甲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72.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장승진]

- 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 ③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 ④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73.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는 탈퇴한 때에 범죄가 종료한다.
- ②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③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적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74.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①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망부(亡父)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해 온 경우에는 그 망부(亡父)명의로 어음발행이 타인명의를 모용한 어음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75. 甲에게 팔호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① 丙이 사망한 후 丙의 상속인 甲은 丙이 생전에 乙에게 명의신탁한 W은행이 발행한 채권의 반환을 乙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그 채권은 자신이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乙 명의로 채권이전등락청구서를 작성하여 W은행에 제출하였다.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 ② 甲은 乙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甲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乙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丙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 ③ 甲은 행사할 목적으로 乙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공문서위조죄)
- ④ 丙은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나이트클럽의 명의를 乙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백지의 양도양수서 용지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乙의 부탁으로 동 서류를 보관하던 甲은 행사할 목적으로 丙의 의사에 반하여 위 서류에 丙이 위 나이트클럽을 甲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사문서변조죄)

76.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① 명의인을 기망하여 사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 ③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 ④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77.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 甲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乙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공문서부정행사죄)
- ㉡ 甲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사문서위조죄)
- ㉢ 甲은 건축담당공무원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하였다(허위공문서작성죄)
- ㉣ 甲은 시청 공무원으로 시청 청사신축공사 현장에 출장을 나간 적이 없는 동료 공무원이 마치 현장출장을 간 것처럼 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장복명서를 생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에게 이를 전송하였다(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8. 일반인인 甲은 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乙에게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乙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丙에게 甲의 훈련사실을 허위보고한 뒤 丙명의로 예비군훈련확인서를 발급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행사죄는 고려하지 말 것) [11 경감승진]

- ① 공문서위조죄의 교사범
- ② 공문서위조죄의 정범
- ③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
- ④ 공무원의 신분이 없으므로 무죄

79.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이를 불실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 ②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80. 문서의 부정행사죄(공·사문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① 타인인 양 허위신고하여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타인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 ②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자가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 경우
- ③ 甲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한 자가 그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경우

81.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①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해 전라의 여성 누드 모델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 ②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관,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
- ④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82. 도박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①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 ②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④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83. 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 ② 행정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 ③ 세무서 주세계장이 양조장 주인의 비밀스런 주정사용과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④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본서인 수원중부경찰서 외사계에조차도 보고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8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 ②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 ③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행하여질 수 없으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85. 다음 중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①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②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③ 아파트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진정인척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 ④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상대방으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여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 데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86.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된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7. 법조문상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죄는? [11 경장승진]

- ①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
- ②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
- ③ 형법 제131조 제3항의 사후수뢰죄
- ④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

8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 ㉡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9.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사승진]

- ①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는 없지만,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있다.
- ③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중여가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

90.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 ①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죄로 처벌한다.
- ③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 된다.

9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장승진]

- ㉠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다.
- ㉡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징계사건도 포함한다.
- ㉣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8.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 경위, 경사, 경장승진]

- ① 경찰관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면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경우 乙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②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어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甲, 乙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甲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객관적으로 완성되었더라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99.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1 경위승진]

- ㉠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에 의해 분리되고, 공소외인만이 피고로 남은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이라면 위증죄에 해당한다.
- ㉡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 ㉢ 상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신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 피고인 자신이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했다면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 될 것이고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